



— 오른쪽으로부터 조재국, 노인철, 정기원, 백화중, 윤병식, 변용찬, 송태민

주 제 : 구조조정기의 보건복지 정책과제

일 시 : 1997년 12월 29일 (월) 14:00 ~ 17:00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회의실

사 회 : 백화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참석자 :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제도연구실장
 노인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연구실장
 윤병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정기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연구실장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연구실장
 송태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장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는 최근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제수지적자가 크게 확대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드디어는 IMF의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IMF 구제금융으로 일단 국제사회에서의 채무불이행 위기는 넘겼지만, IMF가 저성장과 재

정긴축을 요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한계기업의 정리로 실업률이 높아져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삭감과 통화증가 억제로 정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것이며,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교육·농어촌 지원 등 정부 개발계획 우선순위도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저성장-고실업-고물가’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각종 경제·사회정책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와 같은 우리 경제·사회의 위기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를 짚어보고, 우리보다 먼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이 어떻게 이에 대처해 왔는지, 또한 향후의 여건변화 및 이에 따른 정책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방안을 보건복지부문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가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총체적인 경제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제국 :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한마디로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정부의 규제, 미흡한 경쟁체제,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 등 생산요소 시장의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왔던 것이지요. 또한 임금·지가 등 높은 생산요소 비용과 핵심 기반기술의 부재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왔고, 기업, 특히 재벌들은 수익성 제고보다는 무분별한 차입 및 계열사의 상호지급보증을 통한 외형 부풀리기에 급급해 왔으며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 그리고 해외충

격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경제의 ‘조로현상(早老現象)’을 가져온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노인철 : 정부의 일관성·지속성 없는 정책,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의 저하 등도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체질개선 소홀과 근로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탓하고, 기업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고임금구조를 탓하며, 노동자는 고비용구조의 원인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정부와 기업의 정경유착적 비리를 비난하는 등의 ‘네 탓이요’ 풍조도 우리의 경제위기를 가져온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결국 현재의 위기상황은 이때까지 누적되어 온 복합적인 문제점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1995년에는 멕시코가, 그리고 1997년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금융위기로 인해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으며, 훨씬 이전인 1976년에는 영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중 영국과 멕시코는 성공한 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강력한 안정화정책을 통해 2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들 국가들이 어떻게 위기에 대처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정기원 : 멕시코의 경우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GDP의 8% 수준인 경상수지적자를 1년내에 4% 이하로 감축하고 GDP성장률 목표를 2%에서 마이너스 2%로 하향조정하며, 1995년 1/4분기 중 30% 이상이던 물가상승률을 1995년말까지 9%로 하향조정하라는 거시경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세율 인상, 재정지출의 대폭 삭감,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지 개선, 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 외국은행의 투자제한 철폐 등의 정책을 권고하였지요.

이에 대해서 멕시코 정부는 IMF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이는 한편 임금 및 물가 억제 등 고단위 자구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및 공공부문의 임금상승을 7% 이내로 제한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 소득세를 대폭 경감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물가상승률을 10%대로 억제하고 재정긴축을 실시하면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사업운영 독점권의 민간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은행간 합병을 촉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1995년중 만기가 된 단기외채 약 290억달러를 전액 상환함으로써 대외신뢰를 회복하고 1997년 1월에는 모든 미상환 지원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발표하였으며, IMF 융자금도 조기상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멕시코의 1997년도 경제성장률

“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은 8.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윤병식 : 태국은 GDP 대비 8%에 이르는 경상수지 적자 및 변동환율제에 따른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외환위기에 직면하였지요. 특히 은행대출에 의존한 기업의 과잉투자가 기업부실을 초래했고, 이는 곧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확대되었습니다. IMF는 외환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인 금융제도에 대해 이른바 '빅뱅'의 추진을 요구하고, 재정수지 개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중단, 국유기업의 민영화 추진 및 재정 상태 개선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태국정부는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58개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금융기관간 경쟁제고 및 금융감독 기능 강화, 교통·에너지·전력·통신부문의 단계적 민영화 추진 등 자구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금융위기는 멕시코와는 달리 금융기관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므로, 외국인 투자자

의 신뢰를 다시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태민 :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견실한 경제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바트화 폭락 등으로 통화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3.3%, 성장률이 8.0%, 물가상승률이 6.6%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었으나 수입규제와 독과점 관행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취약하였으며, 정부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외국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하여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구제금융 수혜후 환율급등이 진정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체적인 IMF 정책권고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자 : 영국은 1976년 일찍이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적이 있지요?

변용찬 : 그렇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1973년부터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후퇴 등으로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1976년 영국의 파운드 화가치가 1970년의 58.7% 수준으로 떨어지자 IMF에 39억달러의 차관을 공식 요청하여 지원을 받았습니다. IMF 차관으로 환율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낮은 경제성장률, 6%대의 높은 실업률, 126억파

운드라는 사상 최고의 재정적자 등으로 1979년 영국 경제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회자 : 영국 경제는 대처 정부의 과감한 개혁에 의해 회생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위기를 헤쳐나갔는지요?

정기원 : 1979년에 출범한 대처정부는 복지국가의 구조적 해체와 복지공급의 시장화를 겨냥하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시장과 가족이 복지공급의 주된 원천이어야 하며, 자발적 조직과 자선에 의해 복지자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비대한 정부를 작은 정부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지출부문의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단행하였습니다. 영국식 복지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정책에 있어서는 ‘Do-It-Yourself’ 즉, ‘자조’를 강조하며 국가의 책임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한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의 본인부담이 높아졌고, 사회복지시설이 대량 폐쇄되었습니다.

조재국 :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의료서비스의 효율과 효과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공급체계의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대국민 보건의

료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병원의 국영화, 병원종사자의 공무원화, 개업의와 국가의 계약 등에 의한 의료공급의 사회화 등을 추진하였고, 1982년에는 NHS의 기구개편을 통해서 5,000명을 감축하고 운영비의 10%를 삭감하였으며, NHS 정부보조에서 세탁서비스, 식사보조서비스 등을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기업의 종업원 보험료 부담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통하여 민간 의료보험을 장려하였습니다.

윤병식 : 주택과 관련해서도 공영주택의 공급, 주택에 관련된 보조 등 사회복지급여와 관련된 정부지출을 1984년에 1979년 대비 60%를 삭감하고, 공영주택을 거주자에게 33~50% 인하된 가격으로 1979~83년 사이에 50만호를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택건설보조금을 1975년 150,000호에서 1984년에는 37,000호로 크게 줄였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에 보조하는 공영주택 및 민간주택 임차인에 대한 집세 지원 규모를 80%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자 : 영국은 이같은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1986년에 사회보장 개혁을 단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윤병식 : 영국은 1970년부터 1980년간 사회보장비 지출은 5.6배, 보건의료비는 5.8

“영국은 연금제도를 노후보장에 대한 개인책임을 강조, 민간연금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혁...”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1985년 당시 22종류의 급여를 9만명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전체 가구의 75%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11%의 가구는 가구수입의 90% 이상을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고 있었지요. 이에 영국은 연금제도를 노후보장에 대한 개인책임을 강조하며 민간연금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였습니다. 소득비례연금의 산정기준을 ‘최고소득 20년간의 평균소득’에서 ‘전생애 평균소득’으로 수정하고, 급여수준은 기준소득의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배우자의 소득비례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배우자연금의 100%에서 50%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피용자는 기업연금에 가입하든지, 국가가 운영하는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개인연금에 의존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연금을 장려하였고, 연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은행, 투자신탁 등의 금융기관이 연금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

였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IMF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의 자구 노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IMF 관리하에서의 우리나라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엄격한 IMF의 자구 노력 요구로 인해 금융산업의 '빅뱅'이 시작되고,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경제·사회 각 부문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금리, 환율, 주가의 불안이 계속되고 경기침체도 가속화될 것으로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철 : 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찰적 실업을 제외하면 완전 고용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실업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IMF 구제금융후 유례없는 긴축정책과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사회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IMF는 기업의 구조조정방안의 하나로서 정리해고제의 활용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는 일용직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태민 : 실업률이 5%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실업자수는 현재의 50만명 선에서 1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대처정권이 출범하였던 1979년에는 130만이었던 실업자가 지속적인 긴축정책 등으로 1986년에는 32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인철 : 실업, 감봉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또한 고환율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중산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가계소득의 저하는 가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원 : 예, 그렇습니다. 실업의 증대와 높은 물가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이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상대빈곤문제는 전반적인 사회불안 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용찬 : 가정에서는 우선 가장의 실업 및 고물가에 의한 실질가계소득의 감소로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가정내 부양문제 즉, 보육, 노인부양, 환자간호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취업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우리 나라 노동시장 여건하에서는 실업, 하향 취업 등 취업양

상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가족문제로 비화할 개연성이 높아서 이혼 등 가족해체현상의 증가도 우려됩니다.

사회자 : 지금 우리의 경제·사회는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물론 이러한 현실이 당장은 우리에게 ‘시련’으로 작용하겠지만, 이에 도전하여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서서 윤실장님, 정실장님, 조실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1970년대 우리와 같은 외환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영국의 경우 통화억제·긴축재정·물가안정 기조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교훈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IMF에 따른 경제·사회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빠른 시일안에 극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정부·기업·국민 모두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원 : 지금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시급합니다. 정부의 경제운영은 ‘규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창의가 경쟁을 통해 발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문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정부주도 지출중심의 단기적 처

“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와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방보다는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와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조재국 :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법이나 정책이든 당초부터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므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택한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는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태민 :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와 생산적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구축, 그리고 정부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경제주체가 동참하여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정부부터 과감히 재정과 조직을 경량화하는 술선수법적 실천을 보이고 기업이나 국민들도 불필요한 소비의 조장을 근절하는 등 내핍을 생활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변용찬 : 경제위기로 민심이 동요하고 국가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질서의 이완현상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심리적 사회불안 요인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구체적인 조치들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IMF는 긴급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경제운용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예산도 10조원 이상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분야에서 IMF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원 : 1998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규모는 3조 6255억원인데, 정부예산 감축에 따라 보건복지부문 예산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선정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제회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생산적, 투자적 복지부문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이외에는 사업의 긴급성에 따라 사업집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

의 타당성을 재평가하며 부문별 조직의 기능을 재점검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아닌 행사 및 행정경비는 대폭 줄이도록 하는데 기본원칙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변용찬 :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의료·교육 및 자립을 위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부랑인 등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부랑인시설 운영 등에 관한 예산은 대폭 확충되어야 합니다. 1998년 7월 국민연금제도지역 자영자에게 확대 적용되면 전국민 연금화는 달성됩니다. 제도 도입 및 그후 확대과정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던 기존 노령계층 중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92만 4천명을 대상으로 한 경로연금은 1998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만,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관련 민간단체지원 예산 32억원, 장애인관련 민간단체지원 예산 50억원, 여성회관 및 여성·가정단체지원 예산 27억원 중에서 급여성 예산이 아닌 행사비, 소모성 경비 등의 삭감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재국 :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우선순위 조정은 응급의료, 식·의약품 안전, 전염병·

정신질환·암 등 특수질환 관리, 취약지역 보건소 시설 확충 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병상 확충, 가족계획, 기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시기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간 기능 중복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임금 억제 및 실업 증가로 보험료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험재정의 위기가 예상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 증가와 기업의 경영난으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훈련 비용이 급증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합니까?

윤병식 :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책정된 1998년도 예산은 1조 1056억원인데 실업 및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하게 되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수도 증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험급여지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지역조합은 광역시·도단위로 광역화함으로써 취약지역 소규모조합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고용보험은 1998년 1월부터 실업급여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교육 및 자립을 위한 지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

적용됩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급증이 예상되는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의한 재취업의 적극적 추진과 고용의 촉진을 통해 실업의 장기화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실업급여의 증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확보 방안이 포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현행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보험료율 조정 계획에 따라 현행 6%인 보험료율이 1998년에 9%로 인상되는데,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에게 이중고를 겪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병식 : 긴축재정 및 고실업이 예상되는 경제구조 조정기에는 연금보험료 징수율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축에 따르는 금리의 상승으로 당분간 연금기금 운용의 수익률은 높아져 연금재정 안정화

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개방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의 확립도 시급합니다.

노인철 : 기 적립된 연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 극대화에 정책목표가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1997년 11월말 현재 국민연금 운용액은 27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총금액의 69%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사회개발 공공사업의 소요재원으로 조달되고 있으나 경제구조 조정기에는 공공사업부문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대량실업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의 부족상태 발생시 연금기금을 현행 공공부문 수익률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실업보험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 IMF 구제금융후 우리 나라는 유례없는 긴축정책과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량 실업사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원 : 기업에 다니다가 실직한 경우는 기업이 제공하는 직업 및 창업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저소

득계층에서 발생하는 실업의 경우 무방비 상태에서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및 훈련, 생업용자금지원 등 자활보호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적용시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등 공공부문 인력투입의 활성화를 통해 한계계층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자 : 보건의료면에서는 최근 야기되고 있는 환율급등 현상은 원자재 수입가격 및 생산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나라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재국 : 그렇습니다. 1996년 현재 원료의약품의 국내생산액은 4240억원인 반면 수입액은 약 5884억원 즉, 6억 9700만달러에 달하고 있고, 화장품산업도 생산원재료비의 약 80%를 수입하는 등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질병예방을 위한 서비스, 치과치료 및 성형수술 등의 의료수요, 의약품·의료기기, 특히 고가의료장비, 화장품 등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의약품 및 화장품 시장은 내수위축과 함께 업체간 시장점유 경쟁이

가열될 것이며, 중소기업체의 도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자 : 의료부문에 있어서는 중소병원 및 의원급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을 중심으로 환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데 병원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조제국 : 병원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세제·제도 및 법체계의 개선, 융자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의료사업을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종합병원 및 병원의 진료과목, 시설, 인력 등 설립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전문과목별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병원을 특정 진료분야의 전문병원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재정투자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등에서의 자금유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고환율로 인한 방사선 필름 등의 소모성 재료의 구입난과 1천억원대에 이르는 의료장비·시설리스도입에 따른 환차손은 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진료 자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자금책 강화는 물론이고 정부차원에서 방사선

“
교부가가치 신약·의료기기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방안을 강구하여야...”

필름가격에 대한 환율연동제 적용,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도 재특 및 농특자금에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인철 :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R&D)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되, 고부가가치 신약·의료기기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물류전문회사 설립 및 의약품 바코드시스템(bar code system) 도입 등에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보건의료산업을 내수중심의 산업에서 고부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하기 위

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외 보건의료산업 관련 인력·정보네트워크 등 해외 마케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출 판매 전략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송태민 :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가공식품의 원료는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옥수수의 경우 전체 소요량의 98.9%, 소맥은 9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완제가공식품 및 식품원료간 관세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중화된 식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인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 비록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허례허식문화의 불식, 과소비 자제 등을 통해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과소비 사회구조의 조정을 단행한다면 이러한 위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변용찬 : 일부 계층의 세(勢)과시와 함께 남의 이목을 의식하는 체면치레 관습으로 인해 혼례·상례 등 가정의례에 과도한 비용을 들임으로써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의 결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가정의례를 건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례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서에 부응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건전가정의례모형을 개발하고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및 범국가적인 사회운동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기원 : 과다 혼례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랑측과 신부측간의 혼수비용분담구조를 개선하고 하객의 범위를 제한해야 하며, 예식장의 영업관행에 대한 제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다 장례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족묘제도의 도입이나 화장의 확대 등 매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장례식장의 영업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하객이나 조객의 초청을 금지하고, 신문 등 인쇄물을 통한 고지금지 및 경조사비 안받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태민 :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가족의 부양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복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변용찬 : 동감입니다. 주부의 취업확대에

따른 아동의 양육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기능을 강화한 보육시설의 질적인 확충이 요구됩니다. 또한 노인부양문제는 가족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양로 및 요양시설 등 수용시설과 주간 및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파견 등 재가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사회가 노인부양책임을 일부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정에 대한 상담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족문제가 가족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문제가정은 적절한 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되지만, 긴축재정하에서는 복지예산의 획기적인 증대는 어려울 것이므로, 예산항목간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복지재정의 투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IMF 구제금융의 저성장 시대를
우리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척결할 수
있는 제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사회자 : 사실 IMF 구제금융의 여파가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미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성장 시대를 우리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척결할 수 있는 제도약의 전기로 삼고, 정부·국민·기업 등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다같이 힘을 합한다면 어려운 시기는 오히려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에 참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서문희 『보건복지포럼』 간사)